



한동훈(왼쪽부터), 윤상현, 원희룡, 나경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17일 서울 양천구 CBS 사옥에서 열린 'CBS 김현정의 뉴스쇼 특집'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지수(왼쪽부터), 김두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18일 오전 서울 양천구 CBS 사옥에서 열린 'CBS 김현정의 뉴스쇼 특집'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시스

집중견제 속 힘 얻는 韓 vs 자신 기록 도전하는 李

최대과제 극복이 승부처

한동훈 국민의힘 후보는 화려한 경력의 중진들을 상대해서도 개혁적인 이미지를 내세우며 존재감을 내세우고 있다. 다만, 최대 과제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일 것으로 보인다. 한 후보가 당 대표가 되면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거리가 멀어졌다고 알려진 한 후보가 당을 장악해 의원들을 끌고 나갈 수 있을지 의심하는 시선도 있다.

이재명 후보는 2년 전 77.77% 득표율로 당선된 지난 전당대회보다 압도적으로 이겨야 한다는 숙제가 있다. 반(反)이재명을 외치는 후보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득표율을 가져갈 경우, 대권을 노리는 이 후보의 지위도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최근 민주당의 대표 정책을 개편해 중도층에 다가가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이 대표가 의원들과 전통 당원들의 반발을 이겨내고 이를 관철할 수 있을지도 지켜볼 만한 대목이다.

韓, 개혁 이미지로 존재감 발휘 중진 당 대표 상대 득표 여부 주목 尹 대통령과 관계 설정 최대 과제

◆輿 중진 둘러싸인 '정치 신인' 韓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첫 번째 관전포인트는 한동훈 후보가 중진 당 대표 후보들을 상대로 과반 이상의 득표율을 얻어 결선투표 없이 당 대표직에 오를지 여부다. 한 후보는 총선 당시 '김건희 여사 사과 문자 읽씹' 논란의 구체적 내용이 공개되고 친윤석열계의 지원을 받는 원희룡 후보가 띄운 '3대 의혹(사천, 김경률 전 비대위원 금감원장 추천, 댓글팀 운영)' 제기에도 지지도 하락은 나타나지 않았다. 데일리안 여론조사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15~16일 간 전국 성인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무선 100% RDD 방식 ARS로 진행, 응답률 2.3%,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에 따르면 한동훈 후보가 43.7%, 나경원 후보 11.3%, 원희룡 후보 11.3%, 윤상현 후보 6.1% 순이었다.

두 번째 관전포인트는 이른바 '팀 한동훈'이라고 불리는 최고위원들의 지도부 입성 여부다. 팀 한동훈은 청년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진중오 의원,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박정훈, 장동혁 의원을 말한

다. 한 후보 입장에서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라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이 사퇴하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되기 때문에 최소 2명의 한 후보 측 최고위원을 확보해야 지도부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일각에선 친윤계가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1인2표제'를 이용해 친윤계 후보들의 다수 지도부 입성을 노린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韓,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최대 과제

세 번째 관전포인트는 한 후보가 과연 '배신자 프레임'을 벗어날 수 있는가.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의 입장에서, 윤 후보의 최측근이었던 한 후보는 법무부장관으로 '스타' 장관에 올랐으나, 비상대책위원장 직에 오른 뒤에는 윤 대통령과 거리가 멀어지며 대통령실로부터 사퇴 요구까지 받은 바 있기 때문이다. 이미 지난 15일 충청 지역 합동연설회에선 한 후보의 연설 중 일부 관객들이 '배신자'라고 외치며 물리적 충돌을 빚기도 했다.

한 후보는 한 언론 인터뷰에 출연해 일각에서 제기되는 배신자론에 대해서 "(윤 대통령 탄핵은) 제가 제일 잘 막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제가 당선 되면 대통령 탄핵으로까지 이어진다는 식의 공포 마케팅인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는다"고 강조했다.

李, 지난 전당대회 기록 경신 과제 '먹사니즘' 내세워... 민생·경제 강조 중도층 소구 전략 수립에 관심 높아

◆압도적 표 차이로 이겨야 명분 얻는 李

이재명 후보는 자신이 세웠던 기록에 도전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전당대회에서 77.77%라는 압도적 지지율을 얻어 당 대표에 당선된 바 있다. 당시 상대가 당 내 세력이 많지 않다고 평가되던 박용진 전 민주당 의원이었던 것에 비해, 지금 주요 상대는 노무현 정부에서 첫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내고 경남도지사까지 역임한 당에서 경륜이 깊은 김두관 후보이기 때문이다.

이번 전당대회부터 이 대표의 지지층이 많은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이 확대됐기 때문에 지난 전당대회 수준의 득표율이 나오지 않으면 당 대표 연임을 하더라도 그 의미는 반감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소개한 여론조사공정의 조사에서 민주당 당 대표 적합도를 묻자 이재명 후보 42.7%, 김두관 후보 24.1%, 김지수 후보 1.5%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으로 범위를 좁혀보면 이재명 후보 74.9%, 김두관 후보 9.8%, 김지수 후보 0.8%로 이재명 후보와 김두관 후보 사이 격차는 벌어졌다.

한편, 해당 기사에서 인용된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중도층 소구 전략, 득실 계산 잘해야

이재명 대표는 지난 10일 당 대표 출마를 하면서 자신이 표방하는 핵심가치로 '먹사니즘'을 들고 나왔다. 그는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먹사니즘'이 바로 유일한 이데올로기여야 한다"며 민생과 경제를 강조했다. 이 대표는 최근 민주당의 트레이드 마크 정책이었던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금융투자소득세 유

예를 시사하면서 중도층에 소구할 수 있는 전략 수립에 관심이 많은 모습이었다.

이 후보는 지난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에 0.73%포인트 차이로 패배했기 때문에 추후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이른바 '우클릭'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민주당 대표 정책을 건드리는 것에 반감을 가지는 민주당 국회의원이거나 전통 당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이 후보가 당권을 차기 대권으로 가는 지름길로 보이게 하는 것도 문제점을 지적된다. 18일 오전 열린 방송토론회에서 김두관 후보는 이 후보에게 대통령 선거일 1년 전 출마자의 당직 사퇴 예외 조항을 신설한 것을 두고 2026년 지방선거의 공천권을 행사하려는 것 아닌가라는 취지로 물었으나, 이 후보는 "가능하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韓 "민주당 입법 독주 막을 사람 자신 뿐"

>> 1면 '전당대회'서 계속

민주당도 당의 사당화를 비판하며 김두관 후보,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을 강조하며 김지수 후보가 도전장을 던졌으나 이 대표의 아성을 뛰어넘기 힘들다는 시선이 많다.

한동훈 후보는 22대 총선에서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으며 당을 이끌었으나, 참패를 당하고 직에서 물러난 지 3개월 만에 정치권에 다시 돌아오면서 중앙 무대 복귀를 노리고 있다. 한 후보의 조기 복귀에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으나 '김건희 여사 사과 문자 논란' 등 의혹 제기에도 경쟁 후보들을 따돌리는 상황이다.

한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곱지 않은 감정을 가감 없이 내보이며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막을 사람은 자신이라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한 후보는 지난 17일 경기 고양시에서 열린 합동연설회에서 "그동안 여러 곳을 다니면서 지지자들께서 '이제는 일어나라', '저 한사람 지키기 위해 나라 망치고 있는 무도한 민주당과 싸워서 이겨내라'고 명령하셨다"고 말했다

다. 그러면서 "헌법과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라는 명령이었고, 이 정부를 반드시 성공시키라는 명령이었다"며 "저는 그 명령 받들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의 경우 당 대표 연임에 도전하면서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 있다. 첫 번째 당 대표 임기 중 사법리스크 위기에 버텨내며 당을 본인 중심 체제로 개편해왔다. 총선 과정에서 자신에게 비판을 가하던 비이재명계 인사들이 당을 빠져나가면서 연임 기반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전 열린 CBS 방송토론회에서 한동훈 후보가 제안한 '제3차 특검 추천'이 핵심인 고(故) 채상병 특검법안을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다른 후보들과 달리 혼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지금 현재 수사와 기소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또 인사권을 지속적으로 행사하는 검사들이 하고 있다. 그런데 수사가 엉망이 아닌가"라며 "임명을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하는 상황이라 저는 지금 현재 특검법(여당 배제 특검 추천)대로 하는 게 정의롭다"고 선을 그었다. /박태홍 기자